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6회

자료 성격: 출제기준형 · 2026-10-03 · 문항 수: 80 · 근거 기준일: 2026-09-15

성명		점수	/ 100
----	--	----	-------

2026-09-16 전면 교체한 자체제작 예상문제. 작성 기준일 2026-09-15. 전체 정답·현행법령·의미중복 최종
검수와 시험 관리기관 직접 원본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정답·해설은 웹에서 확인하세요. 정답과 해설은
license.3001.co.kr의 같은 제목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센서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검토한다. 공공조달 대상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물품과 서비스가 결합되면 공공조달 대상이 될 수 없다.
- (2) 물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대상도 조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3) 부수 서비스가 있으면 모든 계약이 공사로 바뀐다.
- (4) 복합 대상이면 별도 법령 검토가 면제된다.

2. 개별 수요기관을 기준으로 내부 이해관계자만 묶은 것은?

- (1) 사업부서·계약부서·내부 감사부서
- (2) 사업부서·공급업체·국회
- (3) 시험기관·업종협회·시민단체
- (4) 감사원·계약업체·법령 소관부처

3. 기관에 자체조달 권한을 확대하면서 통제체계를 설계한다. 적절한 조합은?

- (1) 위임받은 뒤에는 결정 주체를 기록하지 않는다.
- (2) 담당자의 구두 판단만 남기고 점검 기능을 없앤다.
- (3) 권한 위임 범위에 맞춘 책임·기록·내부 점검체계를 둔다.
- (4) 자체조달이면 상위 법규 준수 의무를 없앤다.

4. 사업부서의 구매계획과 재정부서의 예산편성 일정이 분리되어, 발주 직전에 자원 부족이 반복된다. 우선 강화할 실행 원칙은?

- (1) 조달계획과 공공재정관리의 통합
- (2) 평가기준의 비공개 운영
- (3) 공급기업의 지명 범위 확대
- (4) 구매 목적의 사후 결정

5. 각 기관이 자체 계약권한은 유지하면서 공통 품목코드와 구매실적 데이터베이스만 함께 사용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계약기능까지 중앙집중형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 (2)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계약당사자도 하나로 합쳐진다.
- (3) 공통 품목코드를 쓰면 각 기관의 수요 파악은 생략된다.
- (4) 분산형에서는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개념상 불가능하다.

6. 필요한 일반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에게 입찰기회를 공개하는 방식의 핵심 특징은?

- (1) 과거 거래가 있는 업체만 공고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 (2) 발주기관이 미리 이름을 정한 업체만 참여한다는 점이다.
- (3) 자격 있는 잠재적 공급자가 공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4) 가장 먼저 문의한 업체와 바로 계약한다는 점이다.

7. 평가 과정에서 담당자가 공고에 없던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새로 참가조건으로 추가하려 한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 (1) 참가자격과 계약이행능력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2) 참가 여부를 결정할 핵심 조건이 사전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모든 참가요건은 낙찰 이후에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는 어떤 계약에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8. 소액구매용 카드의 관리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 (1) 카드 사용은 전자결제이므로 거래증빙을 남기지 않는다.
- (2) 카드번호를 모든 업체에 공개하여 승인절차를 줄인다.
- (3) 카드 소지자 개인의 지출도 소액이면 공공구매로 처리한다.
- (4) 사용권한·용도·거래내역과 증빙을 연결해 사후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9. 전자조달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은?

- (1) 정보통신망으로 소싱·구매·지불 등 조달업무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
- (2) 모든 조달판단을 사람의 검토 없이 기계가 최종 결정하는 것
- (3) 사무실의 종이문서를 모두 새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
- (4) 직원이 이메일 계정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

10. 전자입찰 설계에서 접수시점의 객관적 확인과 개찰 전 내용의 비공개를 각각 확보하려 한다. 적절한 조합은?

- (1) 담당자 기억 / 참가업체가 비밀번호를 공동 사용
- (2) 표준시 기반 타임스탬프 / 권한·시점에 따른 접근통제
- (3) 전송파일 크기 확인 / 낙찰 후 제목 수정
- (4) 파일명에 시각 직접 입력 / 모든 직원에게 열람 허용

11. 혁신제품 지정, 전용물 등록, 실제 공공기관 구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전용물 등록이 제품의 실제 납품 완료를 의미한다.
- (2) 제품 지정·정보 등록과 실제 구매계약은 서로 구별되는 단계이다.
- (3) 제품 지정과 동시에 모든 공공기관이 그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본다.
- (4) 혁신제품 지정이 있으면 제품 모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12. 공공기관이 필요한 특수한 교육운영 서비스를 검색했지만 등록상품에 없다. 교재의 이음장터 활용방식에 부합하는 대응은?

- (1) 검색결과가 없으면 공공기관은 해당 서비스 수요를 표시할 수 없다.
- (2) 서비스 내용은 납품 이후에 공급자가 결정하도록 한다.
- (3) 기존의 무관한 상품명을 골라 실제 내용을 숨긴다.
- (4) 필요한 서비스와 조건을 등록하고 공급 가능한 업체의 응답·견적을 받는다.

13. 기존 분류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기술 제품의 품명 신설을 신청한다. 적절한 제출자료의 조합은?

- (1) 담당자와 업체 사이의 친분 소개만
- (2) 경쟁업체를 배제해 달라는 요청만
- (3) 판매희망가격 한 줄만
- (4) 기능·용도·신설 필요성 및 규격서·도면 등 근거자료

14.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는 경쟁제품을 납품하려는 업체가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자사 상표만 붙이겠다고 한다. 자사의 해당 제품 생산시설·인력·공정은 없다. 검토할 핵심은?

- (1) 자사 상표를 붙이면 생산공정의 주체도 자사로 바뀐 것으로 본다.
- (2)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제품별 직접생산 요건 확인을 대체한다.
- (3) 공급가격이 낮으면 생산시설과 공정 확인은 가격평가에 흡수한다.
- (4) 완제품 재판매 계획만으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15. 직접구매 자재의 계약도면은 연결부 지름 50mm이고 공사 설계도면은 65mm이다. 두 계약 모두 발주 전이며 규격 간 호환성이 없다. 먼저 할 조치는?

공사·자재의 계약범위를 정하는 발주 전 사례이며 구체적 법정 승인 절차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1) 직접구매를 이유로 시공자의 설치업무를 자재업체에 자동 이전한다.
- (2) 가격이 낮은 규격을 자재업체가 임의로 선택하도록 한다.
- (3) 물품 구매규격과 공사 설계의 접속조건을 맞춘 뒤 각 계약의 책임·시공 범위를 확정한다.
- (4) 구매주체가 다르므로 시공 완료 후 맞지 않는 부분을 정한다.

16. 가상 장비의 처리 1건당 배출량은 10kg에서 8kg으로 줄었으나 처리량은 연 1,000건에서 1,500건으로 늘었다. 제시된 운영단계 배출만 계산한 설명은?

배출량·처리량은 가상값이며 운영단계만 비교합니다.

- (1) 연간 총배출이 늘었으므로 건당 환경성능도 나빠졌다.
- (2) 연간 총배출은 8,000kg으로 줄었다.
- (3) 건당 배출은 20% 줄었지만 연간 총배출은 10,000kg에서 12,000kg으로 늘었다.
- (4) 건당 배출이 줄었으므로 연간 총배출도 20% 줄었다.

17. 분석 X는 구매·운영·폐기에 드는 금전적 비용을, 분석 Y는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배출·자원사용 등 환경영향을 다룬다. 일반적인 구별은?

- (1) X는 LCA, Y는 LCC이며 서로 바꾸어 써도 같은 계산이다.
- (2) LCA를 수행하면 환경영향이 모두 자동으로 원 단위 비용으로 환산된다.
- (3) LCC는 구매가격만, LCA는 계약기간만 조사하는 분석이다.
- (4) X는 생애주기비용(LCC), Y는 전과정평가(LCA)의 중심 관심에 해당한다.

18. 우수조달물품 제도 소개문에 “유형의 장비만 대상이므로 소프트웨어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교재의 대상 설명과 비교한 판단은?

- (1) 소프트웨어라면 기술·품질자료 없이 지정된다.
- (2) 물품이라는 명칭이므로 소프트웨어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 (3) 소프트웨어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술·품질·기업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 (4) 소프트웨어는 구매기관의 사용 확인만으로 지정된다.

19.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를 소개하는 문장으로 교재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은?

- (1) 여성기업의 제품·서비스·공사에 대한 공공구매 기회를 지원하며, 유형별 적용 기준을 구분한다.
- (2) 여성기업 지원은 여성 소비자를 위한 생활용품 구매에만 한정된다.
- (3) 여성기업 우선구매는 구매기관이 여성 직원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4)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다른 업종의 허가도 함께 취득한다.

20.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 허락된 영업 등 별도의 예외나 추인 문제는 없다고 할 때, 민법 제5조에 따른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민법 제5조의 기본효과만 묻습니다. 예외·추인·취소권자와 행사기간은 제외합니다.

- (1) 미성년자의 계약이므로 언제나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다.
- (2) 물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성년이라는 사실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 매매계약은 권리만 얻는 행위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
- (4) 동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1. 공사비 산출표가 계약상대자 수행분 7억 원, 그 수행분의 부가가치세 7천만 원, 관급자재 2억 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밖의 항목은 없다는 가정에서 계약방법 판단에 사용할 추정가격은?

모든 금액과 사업 구성은 계산 연습용 가정이다. 예정가격 또는 총사업비 산정 문제가 아니다.

- (1) 7억 7천만 원
- (2) 9억 7천만 원
- (3) 7억 원
- (4) 9억 원

22. A에서는 두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계약을 이행한다. B에서는 희망수량경쟁을 통해 여러 낙찰자가 각자 배정된 물량을 계약한다. 두 방식을 구별한 설명은?

- (1) 공동계약에서는 구성원이 둘 이상이면 각자 별개의 낙찰가격을 독립적으로 확정한다.
- (2) 희망수량경쟁은 낙찰자 전원이 반드시 모든 물량을 공동 이행하는 방식이다.
- (3) 낙찰자가 여러이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모두 공동수급체가 된다.
- (4) A의 공동 이행관계와 B의 업체별 물량 계약관계는 다르므로, 업체가 여러이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공동계약으로 볼 수 없다.

23.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업체가 사무실 주차 불편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법성을 하나의 동일한 법정 심사대상으로 적었다. 적절한 정리는?

- (1) 불편 민원이 포함되었으므로 계약 관련 쟁점도 전혀 검토할 수 없다.
- (2) 법이 열거한 계약 관련 이의신청 사항과 일반적인 편의 민원을 구분한다.
-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이므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언제나 제외된다.
- (4) 같은 기관에서 생긴 일이면 주차 불편도 당연히 같은 법정 계약분쟁 대상이 된다.

24. 조달청이 체결한 제3자단가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이 “내가 납품을 요구하므로 기본 단가계약의 당사자도 언제나 우리 기관”이라고 한다. 적절한 구별은?

- (1) 조달청이 기본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기관은 납품일이나 수량을 정할 역할이 전혀 없다.
- (2) 납품받는 기관과 기본계약 체결 주체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하다.
- (3) 공급기업이 납품기관을 정하면 계약조건도 자동으로 새롭게 작성된다.
- (4) 조달청과 공급자 사이의 기본 단가계약과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역할을 나누어 본다.

25. 담당자가 “나라장터에 올리면 전달이 빠르므로 모든 입찰의 공고기간은 하루면 된다”고 한다. 적절한 판단은?

- (1) 전자공고에는 계약 종류와 관계없이 별도의 최소기간이 존재할 수 없다.
- (2) 입찰자가 한 명만 열람해도 법정 공고기간이 즉시 끝난다.
- (3) 온라인 게시 시에는 국제입찰 여부도 공고기간 검토와 관계없다.
- (4) 전자적 공고 방식과 계약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정 공고기간을 나누어 확인한다.

26. 하도급 대금 관리시스템의 이용 여부를 정하려 한다. 적절한 판단 방법은?

- (1) 전자입찰로 계약했으면 계약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하도급 관리 의무가 항상 적용된다.
- (2) 원도급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 의무 대상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 (3) 계약의 종류·규모·기간 등 법정 이용 요건을 확인하고 의무 이용과 그 밖의 이용을 구분한다.
- (4) 의무 대상이 아니면 법령이 허용한 임의 사용도 모두 금지된다.

27. 퇴직 임직원과 관련된 업체와 공기업이 수의계약을 검토한다. 거래금액이 유리하다는 설명만 제시된 상태에서 필요한 법규 검토는?

퇴직 기간의 숫자는 현행 개별 조문 재대조가 필요하여 출제하지 않는다.

- (1) 퇴직자 관련 제한의 대상·기간·관계와 해당 규정에 정한 예외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2) 퇴직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상 예외 조항도 검토할 수 없다.
- (3) 가격만 낮으면 퇴직자 관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4) 퇴직자가 어느 부서에서 일했는지 등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

28. 계약 법령에 관한 행정기관의 회신을 받은 업체가 “이 답변이 있으므로 법원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이해는?

- (1) 행정 회신은 모든 법원의 판단을 대체하는 확정판결이다.
- (2) 행정기관의 해석 기능과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별한다.
- (3) 회신이 먼저 작성되었으면 이후 법령 개정도 그 회신에 맞추어 무시한다.
- (4) 행정 해석은 어떤 업무에서도 참고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29. 교재의 허위실적 서류 사례에서 업체는 문제의 서류를 빼도 참가자격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만으로 적절하게 결론낼 수 있는 것은?

- (1) 허위서류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제출행위 자체도 진실한 것으로 바뀐다.
- (2) 별도 자격 충족 사실만으로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검토가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3) 참가자격이 충분하면 모든 허위자료를 제출해도 관련 책임이 없다.
- (4) 서류가 허위이면 실제로 충족한 다른 자격요건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0. 정보시스템 납품업체가 허가되지 않은 외부 접속수단을 숨겨 설치했지만 아직 침해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재 검토로 적절한 것은?

- (1) 시스템이 작동하면 설치된 코드와 접속계정은 검사할 수 없다.
- (2) 원격 관리가 편리하면 계약기관의 허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3) 실제 침해손해의 발생 여부와 무단 접속수단 설치라는 행위의 해당 사유를 따로 검토한다.
- (4) 금전 손해가 아직 없으면 허가 없는 접속수단은 항상 적법하다.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요구사항 검토회의가 끝났으나 어떤 항목이 미충족인지 담당자마다 다르게 기억한다. 필요한 산출물은?

- (1) 제품의 장점만 나열한 홍보자료
- (2) 회의 참석자 이름만 적은 출석부
- (3) 요구항목별 충족 여부·근거·보완조치를 연결한 검토표
- (4) 전체 항목의 평균 충족률만 적은 집계표

32. 비상공급계획에는 대체업체 전화번호만 있고 전환 시점과 결정권자가 없다. 가장 필요한 보완은?

- (1) 모든 담당자가 서로 승인했다고 가정한다.
- (2) 각 담당자의 보고 양식만 통일하고 결정권한은 정하지 않는다.
- (3) 실제 공급중단 후 처음으로 담당자를 정한다.
- (4) 공급위험 발동기준·결정 책임·연락 및 실행 절차를 정한다.

33. 과거 구매실적이 높았던 기관이 올해는 해당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수요예측 자료 활용으로 적절한 것은?

- (1) 과거 실적과 현재 사업계획을 함께 반영해 예측을 수정한다.
- (2) 기관의 폐쇄 계획은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 (3) 올해 계획 하나로 과거 자료를 허위라고 처리한다.
- (4) 과거 실적이 많으므로 올해 수요도 같은 것으로 고정한다.

34. 공급업체가 제안한 신형 모델의 성능을 입증하려고 구형 모델 시험성적서와 신형 모델 인증서를 함께 제출하려 한다. 기술적 공급역량 검토에서 우선 확인할 사항은?

- (1) 각 증빙의 대상 모델·시험항목·기준값이 제안 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 (2) 제품명이 비슷하면 유효기간과 시험대상 정보는 삭제해도 된다.
- (3) 서류 개수가 많으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으로 확정한다.
- (4) 서류의 발급기관 명칭만 같으면 모델 차이는 검토하지 않는다.

35. 금속 가구 제조에서 본체를 이루는 철판과 가공 때 소모하는 연마재를 교재의 원가 개념으로 구분하면?

- (1) 둘 다 직접노무비
- (2) 철판은 직접재료비, 연마재는 간접재료비
- (3) 철판은 간접재료비, 연마재는 직접재료비
- (4) 둘 다 일반관리비

36. 회소 부품의 보조 공급선을 확보하면 연간 관리비가 들지만 공급중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안을 비교하는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 (1) 공급선이 늘면 품질검증 비용은 항상 사라진다.
- (2) 계약업체 명단을 늘리면 실제 생산능력 확인은 생략한다.
- (3) 추가 관리비와 공급중단 가능성·피해 감소를 함께 비교한다.
- (4) 관리비가 조금이라도 들면 대체 공급선은 모두 비경제적이다.

37. RFI 제출 후 기관이 특정 성능의 측정 조건을 추가로 물었다. 적절한 후속 조치는?

- (1) 이미 제출했으므로 모든 추가 질문을 무시한다.
- (2) 측정 조건과 근거를 확인해 요청 범위에 맞는 보충정보를 제공한다.
- (3) 응답을 대가로 낙찰 보장을 먼저 요구한다.
- (4) 측정하지 않은 조건을 실제 측정값처럼 작성한다.

38. 가상의 공개규격은 장비 120대 공급을 요구한다. 검증 가능한 동일조건 단가가 50만원이고 별도 설치비가 400만원인데 사업예산은 6,000만원이다. 세금 등 다른 비용 차이는 없다. 예상 부족액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100만원
- (2) 6,400만원
- (3) 0원
- (4) 400만원

39. 효과적인 사전규격 개선 의견서의 구성으로 적절한 것은?

- (1) 사업명만 적고 모든 규격을 바꾸어 달라고 한다.
- (2) 타 업체에 대한 비난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3) 문제 조항 위치·구체적 사유·증빙·수정 대안을 연결한다.
- (4) 요구와 무관한 특허 목록만 제출한다.

40. 가격 개찰 뒤 기관이 당초 공고에 없던 “본사와 기관 사이 거리”를 새로운 가점항목으로 넣으려 한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 (1) 이미 제출된 입찰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 (2) 비가격 항목은 어떠한 입찰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 (3) 가격이 개찰되면 가점항목의 사전 공개 의무는 사라진다는 점이다.
- (4) 거리 항목은 계량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41. 가상의 입찰공고는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으나 제안서 제출은 지정 장소 방문 제출로 명확하게 정했다. 적절한 준비는?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게시 매체와 별개로 해당 서류의 지정 제출 방법·장소·시각을 확인한다.
- (2) 공고 페이지를 열어 본 것으로 제안서가 접수된다.
- (3) 온라인 공고이면 어떤 서류든 전자우편 제출로 같음한다.
- (4) 문서 파일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42. 공식 용역 공고의 사례 조건은 나라장터에서 확인되는 일부 서류의 별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만료된 등록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하도록 한다. 연계된 증명서가 만료된 업체의 준비로 적절한 것은?

공고의 서류 간소화·갱신 조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모든 전자입찰의 동일한 제출기한을 뜻하지 않는다.

- (1) 서류제출 간소화 대상이면 증명서의 만료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 (2) 연계자료를 쓰는 업체는 공고가 요구한 유효기간 점검을 기관에 전부 떠넘길 수 있다.
- (3) 별도 파일 제출 생략과 증명서 유효성은 구별되므로 공고가 정한 때까지 유효한 서류로 갱신하고 연계 확인 여부를 점검한다.
- (4) 시스템에 과거 파일이 보이므로 만료된 상태로 제출을 끝낸다.

43. 가상 공고가 특정 공급협약에 따른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도록 정했다. 업체가 개찰 1순위가 되었지만 확약서 확보 가능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바로 확인해야 할 것은?

가상 공고의 해당 확약서 요구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전제입니다.

- (1) 확약서가 없으면 발주기관의 협약조건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바꾼다.
- (2) 입찰보증 확약서에 해당 공급협약 문구를 추가해 대신 제출한다.
- (3) 요구된 계약체결 서류의 발급조건과 제출 가능 여부이다.
- (4) 가격 1순위이면 공고된 계약체결 서류는 모두 면제된다.

44.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에서 공고된 최소 인정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높은 기술점수를 예상한다면 심사에 포함해 달라고 한다. 그 최소실적이 유효한 참가요건이라는 전제에서?

- (1) 기술점수가 높을 것 같으면 참가요건은 자동 충족된다.
- (2) 기술점수 예상과 별개로 참가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3) 최소실적은 낙찰 후 처음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지금은 무시한다.
- (4) 참가요건을 못 갖춘 업체에게만 가격가점을 준다.

45. 수의계약을 검토하는 업체의 견적서는 제시한 가격이 10일까지 유효하다고 정했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기관은 15일에 계약하려 한다. 가격이 계속 같다고 별도 확인 없이 처리하기보다 필요한 것은?

견적 유효기간과 계약 미성립을 명시한 가상 사례이며 특정 법정 견적 유효기간을 묻지 않는다.

- (1) 견적을 한 번 받았으므로 공급자는 기간 제한 없이 같은 가격에 구속된다.
- (2) 업체에 유효기간 연장 또는 갱신 견적을 확인하고, 확정된 가격·조건으로 계약을 검토한다.
- (3) 기간이 끝난 견적서의 날짜를 기관이 임의로 고쳐 사용한다.
- (4) 수의계약은 계약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만료 여부도 고려하지 않는다.

46. 가상 평가표에서 ㉠ 완료 실적 건수를 정해진 산식에 넣는 항목과 ㉡ 장애복구 전략의 적절성을 전문위원이 판단하는 항목이 있다. 평가 접근을 구분한 것은?

평가항목과 방법은 지문에서 정한 가상 기준이며, 국내 모든 사업의 정량·정성 배점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 위원의 호감도 평가, ㉡ 실적 건수의 단순 합산
- (2) ㉠ 산식이 있으므로 증빙 확인 생략, ㉡ 전문 판단이므로 기준 확인 생략
- (3) ㉠ 증빙과 산식의 일치 확인, ㉡ 제안 내용과 평가기준에 따른 전문적 판단
- (4) ㉠ 낮은 가격을 준 업체에 가산, ㉡ 문서가 긴 업체에 가산

47. 방식 X는 기술요건 통과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방식 Y는 기술·가격의 가중 합계로 협상순위를 정한다. 두 가상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1) Y는 기술요건 통과 여부만 보고 기술점수 차이는 무시한다.
- (2) 두 방식은 기술자료를 사용하므로 최종 결과도 언제나 같다.
- (3) X도 기술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가격과 관계없이 선정한다.
- (4) X의 기술통과 판정과 Y의 기술점수 기여는 평가에서의 기능이 다르다.

48. 가격협상 중 담당자가 경쟁업체의 비공개 원가내역을 보여주며 그보다 낮추라고 압박하려 한다. 적절한 협상 운영은?

- (1) 보호해야 할 경쟁업체의 비공개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허용된 가격근거로 협의한다.
- (2)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경쟁업체의 비공개 자료를 자유롭게 제공한다.
- (3) 자료의 회사명을 지우면 모든 상세 원가 공개가 허용된다.
- (4) 우선협상대상자에게만 보여주면 비밀 유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49. 공고된 순서에 따라 A·B·C가 협상적격자로 정해졌다. A와의 협상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차순위 협상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행동은?

A와의 협상은 종료되었고, 차순위 협상을 진행하도록 정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 (1) B와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결정한다.
- (2) A가 첫 순위였으므로 합의 내용 없이 A와 계약을 체결한다.
- (3) B·C의 가격을 A에게 알려 A의 합의를 강제한다.
- (4) 협상을 거치지 않고 C와 즉시 계약한다.

50. 가상 기술평가에서 A의 위원별 점수는 90·90·90점, B는 80·90·100점이다. 동일한 세 점수를 단순 평균하며 다른 보정은 없다. 낙찰 결과를 분석할 때 적절한 해석은?

위원 수·점수 및 평균방식은 학습용 조건이다.

- (1) A가 모든 위원에게 90점을 받았으므로 평균은 270점이다.
- (2) 두 평균은 90점으로 같지만 B의 위원별 점수 범위가 더 크므로 평가 근거의 차이를 추가 검토할 수 있다.
- (3) B의 점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 평가가 입증된다.
- (4) 평균이 같으므로 위원별 평가 양상도 같다.

공공계약관리

51. 계약관리 담당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다. 계약금액과 업체 연락처는 있으나 누가 어떤 산출물을 언제 확인하는지는 정리돼 있지 않다. 계획에서 보완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약문서에서 합의한 범위 안의 관리계획을 전제합니다.

- (1) 최종 납기만 기록하고 중간 확인 책임은 배제한다.
- (2) 계약문서에 따른 산출물·일정·책임자·확인기준을 연결한 관리계획
- (3) 담당자 변경 전의 구두 설명만 유지하고 문서화는 하지 않는다.
- (4) 대표 연락처를 늘리고 산출물 확인은 최종 지급 뒤로 미룬다.

52. 용역의 특정 업무를 업체 X에 맡기는 계획이 승인되었다. 계약조건은 하도급 업체를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요구한다. 계약상대자는 X의 사정으로 같은 업무를 Y에 맡기려 한다. 적절한 조치는?

이 계약은 해당 하도급을 허용하고 업체 변경에 기관 승인을 요구한다고 가정합니다.

- (1) Y의 자격과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약정된 변경승인 절차를 거친다.
- (2) X가 Y를 추천했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변경승인을 갈음한다.
- (3) Y가 작업을 완료한 뒤 최초 승인을 소급해서 Y 명의로 고친다.
- (4) 업무명과 하도급금액이 같으면 기존 X의 승인을 Y가 승계한다.

53. 3개 동의 독립된 설비를 설치하는 계약 중 1개 동 설비는 검사·인수를 마쳐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을 종료하면서 당사자들은 이미 인수한 부분은 유지하기로 적법하게 정했다. 사후 정산 방향은?

이미 인수한 가분 부분을 유지하는 유효한 합의가 있고 그 합의의 유효성은 다투지 않습니다.

- (1) 유지하기로 한 인수 부분의 대가와 미이행 부분의 선금·비용 등을 구분하여 정산한다.
- (2) 일부가 종료되므로 이용 중인 설비의 대가도 검토 없이 전액 부인한다.
- (3) 설비가 가분적이면 미정산 선금도 계약상대자에게 모두 귀속된다.
- (4) 3개 동 전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전액 지급한다.

54. 맞춤형 장비가 공장에서 완성되었지만 계약상 지정 장소까지 운송·설치해야 하고 아직 공장 밖으로 출하되지 않았다. 현재 상태에 대한 기록으로 적절한 것은?

- (1) 물건이 만들어졌으므로 계약상 납품도 모두 완료되었다.
- (2) 운송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제작 완료 사실도 기록해서는 안 된다.
- (3) 생산 완료 후에는 기관이 모든 미이행 작업을 승계한다.
- (4) 제작은 완료했으나 계약상 운송·설치를 포함한 공급 이행은 아직 남아 있다.

55. 학습용 성과지표 OTIF를 “약정일을 지키고 수량도 완전하게 납품한 건수 ÷ 전체 건수”로 정의한다. 20건 중 정시납품 18건, 수량 충족 17건이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건은 16건이다. OTIF는?

가상 성과지표 정의와 수치이며 모든 공공계약에 강제되는 평가식이 아닙니다.

- (1) 90%
- (2) 87.5%
- (3) 80%
- (4) 85%

56. 표본검사를 허용한 계약에서 업체가 이전 생산분의 우수 시료를 임의로 제출했다. 실제 이번 납품 로트는 다른 원재료를 사용했다. 검사 준비에서 핵심적으로 보완할 것은?

표본검사가 적법하게 허용되며 세부 채취 규칙은 해당 계약의 검사계획을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 (1) 시료 성능이 높을수록 대표성 확인은 생략한다.
- (2) 표본검사를 한다는 말은 업체가 원하는 과거 시료를 제출해도 된다는 뜻이다.
- (3) 적용 검사계획에 따라 실제 납품 로트를 대표하는 시료인지 식별·채취 이력을 확인한다.
- (4) 동일 상표이면 생산 로트와 원재료 변경은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57. 가상 지급명세에서 이번 기본 지급액은 500만 원, 적법하게 확정된 지체상금은 20만 원, 기관의 대금지급 지연이자 3만 원이다. 다른 정산은 없으며 각각 공제·가산하도록 정했다. 이번 지급액은?

상계·공제 및 이자 가산의 적용과 금액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학습용 조건입니다.

- (1) 500만 원이다.
- (2) 477만 원이다.
- (3) 523만 원이다.
- (4) 483만 원이다.

58. 기관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보관하고 있다. 하자가 발생하자 담당자가 “보증서가 있으니 물품은 이미 복구된 것으로 처리하자”고 한다. 적절한 판단은?

- (1) 보증서 발급은 실제 보수 완료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 (2) 보증수단 확보와 하자 통지·실제 보수·복구 확인을 구별해야 한다.
- (3) 보증금액만큼 수리기간이 자동 단축된 것으로 본다.
- (4) 보증수단이 있으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를 통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

59. 검토 대상 문서 A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약정 범위의 이행을 담보하고, B는 보험기간 중 담보한 우연한 물적 사고 손해를 보상한다. 적절한 검토 태도는?

- (1) 두 문서에 모두 금액이 있으므로 같은 위험을 동일하게 보장한다.
- (2) 계약이행 보증과 손해보험의 담보사고·보장범위·면책조건을 각각 확인한다.
- (3) 계약이행 보증은 계약과 관계없는 모든 재산손해를 보상한다.
- (4) 보험이 있으면 별도 약정 없이 모든 계약불이행도 보장한다.

60. 학습용 검토기준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를 해지 검토 사유로 둔다. 지체상금은 해당 금액에 이르렀지만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준만 적용할 때의 판단은?

교재 설명을 제시 기준으로 축약한 학습용 사례입니다. 그 밖의 해지 사유는 없으며 지체상금 계산 자체는 묻지 않습니다.

- (1) 금액에 도달한 즉시 이행 가능성 확인 없이 계약이 자동 소멸했다고 본다.
- (2) 계약보증금 상당액은 비교 기준이므로 지체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3) 금액 도달 사실만으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 (4) 이행 가능성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 공급자의 매출액만 크면 두 요건이 충족된다.

61. 물품구매 공고 초안에는 입찰서 제출일과 개찰일만 있고 계약 착수일·완료일은 없다. 공급자가 생산·인력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보완은?

- (1) 입찰 참가자 수를 적으면 납품기한 기재를 대신한다.
- (2) 입찰 일정과 별도로 계약 이행의 착수·완료 시점을 명시한다.
- (3) 개찰일을 계약 완료일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 (4) 계약 이행기간은 낙찰자가 임의로 정하므로 공고에 다루지 않는다.

62. 가상 물품 적격심사는 통과점수 90점이며, 입찰가격점수에 다른 분야의 배점한도를 더해도 통과점수에 못 미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A의 가격점수는 54점, 나머지 분야 최대점수는 35점이다. 이 규칙에 따른 판단은?

배점·통과점수는 가상이고 신인도 등 별도 추가점수는 없습니다.

- (1) 자료를 많이 제출하면 배점한도를 넘는 36점을 줄 수 있다.
- (2) 나머지 분야를 만점 받으면 90점이므로 반드시 심사한다.
- (3) 가격점수가 과반이므로 통과가 이미 확정되었다.
- (4) 최대 89점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생략 대상이다.

63. 외자계약 검토표에 “외화결제이므로 지정장소 운송·보험·통관 비용은 모두 공급자 부담”이라고 적었다. 기본 개념상 적절한 수정은?

- (1) 원화결제 계약에서는 국외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
- (2) 보험료 부담자는 언제나 결제은행으로 자동 정해진다.
- (3) 달러로 결제하면 모든 인도조건의 비용 부담이 같아진다.
- (4) 대금의 결제통화·방식과 운송·위험·비용을 정하는 인도조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64. 가상 규격은 납품되는 각 장치의 절연 성능이 모두 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했다. 측정값은 95, 96, 97, 98, 84이며 기관은 평균이 94이므로 모두 적합하다고 보고하려 한다. 판단은?

모든 장치에 적용되는 최소 성능과 전수 측정값을 제시한 가상 규격입니다.

- (1) 다섯 장치의 합계가 90보다 크므로 적합하다.
- (2) 평균이 90을 넘으면 개별 최소값은 확인하지 않는다.
- (3) 가장 높은 값 98만 대표값으로 삼으면 모든 장치가 적합하다.
- (4) 개별 최소기준이므로 84인 장치의 부적합을 평균값으로 상쇄할 수 없다.

65. 가상 물품계약에서 특수 시험비만 사후 원가검토 대상으로 두고 나머지 단가는 확정했다. 업체가 시험비 정산 때 이미 확정된 일반 부품비까지 실제 지출액으로 재산정하려 한다. 우선 판단은?

특수 시험비에 한정된 사후검토 약정이 유효하고 다른 변경사유는 없습니다.

- (1) 계약이 정한 사후검토 대상과 확정 항목을 구분하여 정산 범위를 확인한다.
- (2) 한 항목이 사후검토 대상이면 계약 전체가 제한 없는 실비정산으로 바뀐다.
- (3) 사후검토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4) 시험비에 잔액이 있으면 확정 부품 단가를 임의로 늘려 맞춘다.

66. 폐기물 관련 용역의 명칭은 “수집·운반 및 처리”인데 업체는 운반 업무 자격만 확인했다. 공고 검토에서 우선 보완할 사항은?

- (1) 운반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처리 과업과 자격은 검토에서 제외한다.
- (2) 처리비용을 견적에 넣으면 처리 업무 자격의 검토도 대체된다.
- (3) 수집·운반과 처리의 각각의 과업 범위 및 해당 자격·이행 방식이다.
- (4) 폐기물 용역이면 모든 종류의 폐기물과 처리방식에 같은 자격이 적용된다.

67. 연구용역에서 연구설계와 분석방법이 업체마다 크게 다르고 전문성이 성과에 중요하다. 해당 요건에 맞아 협상계약을 검토하는 취지는?

- (1) 제안된 수행내용과 입찰가격을 함께 평가하고 협상을 통해 적정한 계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이다.
- (2)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 예산과 공고조건을 배제하고 평가위원이 자유롭게 계약금액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 (4) 제안 내용을 보지 않고 최저가격만으로 결론내리기 위해서이다.

68. 경쟁적 대화 참여자가 자사의 실증설비를 근거로 이행능력을 설명한다. 교재가 설명하는 자료 확인과 후속 평가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 (1) 사업장 확인을 하면 최종 제안서 평가는 어떤 경우에도 생략된다.
- (2) 필요한 경우 제시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종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3) 현장 확인 결과는 긍정적인 부분만 남기고 제한사항은 삭제한다.
- (4) 대화 중 한 말은 현장 확인 없이 언제나 입증된 사실로 취급한다.

69. 공고는 임시저장 후 파일이 암호화돼 원본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한다. 파일 검사의 적절한 시점은?

- (1) 파일 크기만 보고 다른 내용은 보지 않는다.
- (2) 암호화되므로 내용 확인은 불필요하다.
- (3) 첨부 후 임시저장하기 전에 내려받아 확인한다.
- (4) 최종 제출 뒤에만 확인한다.

70.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의 계약 모델 X를 선택했는데 업체가 “재고가 없으니 내부 제품 Y를 대신 보내겠다”고 한다. Y가 계약품목인지, 규격변경 승인이 필요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절한 조치는?

- (1) 선정·계약된 품목과 변경 요건을 확인하고, 임의 대체납품을 허용하지 않는다.
- (2) 처음 선택한 품목을 주문서에 남기고 실제 납품만 Y로 처리한다.
- (3) 업체의 내부 신모델이면 수요기관의 확인이나 승인 없이 대체한다.
- (4) 업체가 같은 가격을 받겠다고 하면 제품 확인 없이 허용한다.

71. 가상 규격의 거래단가 관측이 8·8·8·10·12이고 각 거래의 수량은 동일하다. 가장 자주 관측된 가격인 최빈가격은?

단가는 가상 단위이며 이 값이 실제 협상기준으로 자동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 (1) 12
- (2) 10
- (3) 9.2
- (4) 8

72. 가상 MAS 제안요청은 “적용 가능한 할인 후 가장 낮은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한다”고 정했다. 등록가격은 100만 원이며, 해당 수량의 할인가격은 95만 원, 적용 가능한 행사 가격은 92만 원이다. 94만 원 제안에 대한 판단은?

가격과 적용 규칙은 학습용 가상 조건이며, 세 가격의 세금·규격 조건은 같습니다. 별도 최저 제안비율은 다루지 않습니다.

- (1) 등록가격 100만 원보다 낮으므로 조건에 맞는다.
- (2) 기준 상한은 92만 원이므로 94만 원 제안은 제시된 조건에 맞지 않는다.
- (3) 두 할인가격의 평균인 93.5만 원을 상한으로 사용한다.
- (4) 수량 할인가격 95만 원보다 낮으므로 행사 가격은 검토하지 않는다.

73. 납기 평가가 낮게 나왔는데 원자료의 납품 완료일에 입력 오류가 발견됐다. 개선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 (1) 검사·인수 등 증빙과 시스템 기록을 대조하여 원자료 정정 절차를 검토한다.
- (2) 점수를 올리기 위해 실제 지연된 다른 거래도 함께 삭제한다.
- (3) 오류가 확인되어도 평가자료의 날짜는 검토할 수 없다.
- (4) 교육 가점만 신청하면 잘못된 완료일도 사실로 바뀐다.

74. 교재가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사와 특정 전문분야의 시공을 중심으로 하는 공사로 구별한 취지는?

- (1) 종합공사는 모든 개별법상 면허를 하나의 이름으로 대체한다는 뜻이다.
- (2) 계약금액이 낮은 것은 언제나 전문공사, 높은 것은 언제나 종합공사라는 뜻이다.
- (3) 전문공사는 품질·안전 관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 (4)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업무 성격을 구분하여 해당 시공자격·발주 범위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75. 두 공사의 금액은 같지만 한 사업에는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특별한 시공계획 검토가 필요한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심사제 세부 유형을 검토하는 태도로 적절한 것은?

- (1) 담당자가 어렵다고 느끼면 공식 기준과 관계없이 고난도 유형을 확정한다.
- (2) 금액뿐 아니라 공종의 난이도·실적 제한·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필요성 등을 함께 확인한다.
- (3) 금액이 같으면 공종·기술적 특성과 관계없이 같은 세부 유형만 적용한다.
- (4) 고난도 특성이 있으면 계약상 가격이나 이행능력 심사를 모두 생략한다.

76. 가상 공사 적격심사의 통과점수는 92점이다. A의 수행능력은 28점, 가격은 68점이며 확정된 결격 감점 5점을 총점에서 빼도록 정했다. 다른 가감점은 없다. 결과는?

기준점·점수·감점 방식은 가상이며 실제 공사규모별 배점이나 제재처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91점으로 통과점수에 미달한다.
- (2) 가격점수 68점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총점 계산을 하지 않는다.
- (3) 101점으로 통과한다.
- (4) 96점으로 통과한다.

77. 학습용 변경규칙은 신규 비목의 기준단가 120과 그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96 사이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값의 평균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단가는?

제시한 변경조건이 유효하고 해당 산식의 적용요건은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 (1) 216
- (2) 120
- (3) 108
- (4) 96

78. 업체가 공기를 크게 단축하는 기술대안을 냈지만 내구성과 유지관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하지 않았다. 기술제안 검토에서 적절한 보완 요구는?

- (1) 새 기술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제안의 실증·계산 자료를 검토하지 않는다.
- (2) 기술제안이므로 가격이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면 안 된다.
- (3) 공기를 줄이면 성능과 유지관리 조건은 모두 낮추어도 된다.
- (4) 공기단축 근거와 함께 요구 성능·시공성·생애주기 비용 등 다른 주요 영향도 입증하도록 한다.

79. 기술용역의 참가자격 검토에서 사업 A는 전력 설계이고 사업 B는 전력 감리이다. 교재는 두 분야의 관련 등록을 구분해 제시한다. 업체가 설계업 등록증만으로 감리업 등록 요건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적절한 검토는?

개별 업체의 겸업 등록 여부나 특례는 지문에 없으며 현행 세부 자격요건 전체의 최종 검토는 별도입니다.

- (1) 실제 발주 업무가 설계인지 감리인지 구분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등록을 별도로 대조한다.
- (2) 둘 다 전력과 관계되므로 설계업 등록은 언제나 감리업 등록을 포함한다.
- (3) 업무 명칭을 설계로 바꾸면 실제 감리를 수행해도 자격 확인이 필요 없다.
- (4) 감리업 등록이 있으면 모든 건설 분야의 설계·시공 자격도 자동 취득한다.

80. 하도급계약은 실내 마감공종만 맡기지만 현장에서는 같은 업체가 계약서에 없는 구조 보강까지 수행 중이다. 적절한 관리 검토는?

- (1) 공사 총액이 같으면 업무 내용이 바뀌어도 관련 자료를 수정할 필요 없다.
- (2)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으면 공종별 자격과 계약범위는 관계없다.
- (3)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계약서의 공종은 무한히 늘어난 것으로 본다.
- (4) 실제 수행 범위와 계약·자격·승인 또는 통보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답안 기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